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배포 시	배포	2019.3.12.(화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	<b>담 당 자</b>	김영근 사무관(02-2100-2693)
	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(02-2100-2684)		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83)
	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(02-3145-7701)		회계심사총괄팀 김은조 부국장(02-3145-7702)
	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 손 호 근(02-3149-0351)		감리1본부 선임감리위원 박 인 숙(02-3149-0363)
	한국회계기준원 제1팀장 최 현 덕(02-6050-0166)		권 용 우 책임(02-6050-0179)

## 제 목 :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등

- ◇ 금융위원회는 新외부감사법 시행(' 18.11.1일)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,
- ① 회계기준 및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「감독지침」을 제공하고,
  - ②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
- ①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(IFRS1109)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(첨부자료 참조)
-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인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
  -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('회계처리 자문' 또는 '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')가 아님
- ②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(3월중)
- ③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(연내)

## 1. 회의 개요

-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함

◇ 일시 및 장소 : '19.3.12(화) 08:00~09:0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◇ 참석자 :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(주재), 상장회사협의회·코스닥협회·코넥스협회 부회장, 금감원 전문심의위원,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, 회계기준원 상임위원

## 2.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
### 가.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

-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

- 제도의 변화\*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함

\* 외부감사인의 독립성·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('18.11.1),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(예: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) 등

-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
- 또한,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

\* (예시)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(외부감사법 §6⑥)

오용 사례	▪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'자문'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
-------	---

- 상장회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("one strike"-out)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

\* '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,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

## 나. 대응 방향

- 1]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「감독지침」을 제공 (간담회 종료 후 즉시)

☞ [첨부]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

- 2] 사전 예방·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‘재무제표 심사제도\*’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

\*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

- 3]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(3월중)

## 다. 당부 사항

-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,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랍
- 현장은 ‘진공상태’가 아니라 마치 ‘살아 움직이는 생물’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
  -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‘회계개혁’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할 것임

## 3. 향후 계획

-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\* 마련

\*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(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),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

[첨부]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

[별첨]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(全文)

##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

### 1.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

#### 가. 배경

□ (제도) '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(IFRS9)이 시행됨

○ 모든 지분상품(비상장주식 포함)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

- 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, ②원가가 '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'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로 측정 가능

※ 종전 기준(IFRS 1039)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,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

□ (현황)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

-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(벤처캐피탈 등)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,
-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가치평가의 한계
  -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계획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이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(사모펀드 등)에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얻기 어려움
-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
  -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큰 상태
  -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외부평가 결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
- 가치평가 인프라의 부족
  -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(중대형 회계법인, 신평사 4곳)이라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고 제때 평가결과를 받기 어려움
  - 무형자산의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

## 나. 감독지침

### < 同감독지침의 성격 >

-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,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
-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同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

① 모든 지분상품(비상장주식 포함)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

①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IFRS1109 B5.2.3~B5.2.5 참조)

- ① 예산, 계획,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② 피투자자가 이를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
-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
-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, 상업분쟁, 소송,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
-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(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)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
- ⑧ ①~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

② 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 
(IFRS1109 B5.2.3~B5.2.5 참조)

- 기업규모, 자본조달방법(공모 또는 사모),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가능  
(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~39 참조)

### < 예시 >

-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
-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

### ③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\*고 볼 수 있는 경우

- \*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

⇒ 기업은 ①~③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

### ②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함

-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법,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및 그 한계,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
  -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
-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

### ③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(기업)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

-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'과정'\*(Due Process)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
  - \*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 · 중립성 · 일관성, 외부용역의 전문성 · 독립성 등
-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,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
-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



## 2.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해석

### 가. 배경

- (제도) 외부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,
  -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함 (법 §22)
- (현황) '18.11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,
  -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(forensic) 조사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①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법 §22를 이유로 자체 조사를 요구
- ②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기업에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

### 나. 감독지침 (법령해석 등)

- ① (외부감사인)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
  - \* (§22②)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
  -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및 재무제표 영향평가 자료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 (회계감사기준서 240 참조)
- ② (내부감사기구) 경영진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
  - \* (§22③)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
  - 조사에 필요한 정보,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\*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
  - \* (예)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,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
  - '조사결과' 및 이에 따른 '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'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

※ 향후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금감원,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나갈 계획

### 3.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관련 법령해석

#### 가. 배경

- (제도) 외부감사법(§6⑥)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

\* 취지: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,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

- (현황) 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① 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,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
- ②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

#### 나. 감독지침 (법령해석)

- 외부감사법 §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'직접적인'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,

-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「회계감사기준」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함

-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'자문' 또는 '관여'에 해당하지 않음

-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- 다만,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(§6⑥) 위반 소지가 있음